

통일 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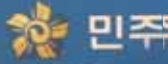
한반도 안보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동일 Focus



한반도 안보, 어



북한이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을 비롯해 미사일 발사실험을 계속하면서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24일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여 기습공격과 핵 탑재가 가능해졌고, 9월 9일에는 5차 핵실험을 강행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 안보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인한 불안해진 한반도 상황과 국제정세 등을 진단하고 사드배치 등으로 분열된 우리 국민의 국론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평화통일자문회의



‘한반도 안보,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좌담회는 유호열 수석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수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라미경 순천향대 사회과학연구소 교수, 박형중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장,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연구실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통일포커스」(제12호)는 지난 9월 2일 개최된 좌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발언록 형태로 정리했으며 좌담회 이후, 9월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여 이에 관련된 질의를 패널들에게 서면으로 받아 자료에 포함시켰다.

‘북핵문제 해법은 통일 밖에 없다’는 인식 확산시켜야 해

북핵 포기시킬 수 있다는 굳은 의지와 노력 필요

● **김영수 서강대 교수(사회)** :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좌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담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유호열 수석부의장님께서 이 자리의 의미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유호열 수석부의장** : 「통일포커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배포되고 있으며 통일 관련 참고서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책자입니다. 정독해서 정리

통일Focus

▶좌담

- 김영수 서강대 교수(사회)
-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김흥규 아주대 교수
- 라미경 순천향대 교수
-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연구실장
- 박형중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장

해 두면 강의나 방송, 인터뷰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활용도가 높은 책자인 만큼 이번 주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정권은 계속된 핵·미사일 실험 발사로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안보라는 것이 안보만의 문제만 아니라 통일문제, 외교, 국내 정치까지도 연결된 복합적인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에서도 많은 갈등과 대립된 시각과 입장들이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평통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우리 국론을 결집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안보 현안을 전략적으로, 또 국가이익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국론이 적어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분열되지 않고 합의를 이루어서 안보차원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국민들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나 정책기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두가 바쁘신데도 아침 일찍 나와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좋은 말씀을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열
수석부위원장

한반도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듣고 있지만 최근에는 정말로 의미있게 변하고 있는 듯합니다. 전문가들의 진단을 통해서 그 상황을 파악하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영수 교수(진행)** : 수석부의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좌담회는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늘 하시던 대로 생방송 중이라고 생각하시고 좌담회에 참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한반도 안보,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입니다. 사실 한반도 안보는 언제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급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듣고 있지만 최근에는 정말로 의미있게 변하고 있는 듯합니다. 변하면 불안하고 불안할 때는 앞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진단을 통해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게 되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환경이 상수였는데 대부분이 변수로 변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변하지 않던 북·중 관계도 올해에는 순치관계가 아닌 듯한 모습도 보이곤 했습니다.

2016년 하반기에 내다보는 한반도 안보문제,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북한이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고 비행거리가 500km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상의 성공’ 이라는 평가와 함께 북한의 기습적인 공격으로부터 위협이 심각해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먼저 이번 SLBM발사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진무 박사께서 먼저 말씀해주시겠습니다.

북핵 위협, 지나친 과소평가도 과대 평가도 안돼

●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금년 1월부터 북한이 4차 핵실험과 14차례의 각종 미사일 발사 등 핵 활동을 강화하면서 북한의 핵위협이 우리에게 더욱 더 크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이 SLBM의 비행시험에 성공하고 5차 핵실험까지 감행함으로써 조만간 북한에 핵무기가 실전 배치되어 당장 핵공격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과민 반응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북한의 핵 위협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해서도 안되지만 또한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SLBM 발사 성공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지난번 SLBM 발사 성공은 SLBM의 개발 과정 속에 사출 시험과 콜드런칭(Cold Launching), 비행시험, 그리고 마지막 유도장치를 통해서 목표물을 타격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세 번째 단계인 비행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SLBM이 실전 배치된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현 단계에서 북한의 SLBM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먼저 SLBM은 핵 폭탄과 결합되어 핵탄도미사일이 되어야 합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

즉, 보다 중요한 것은 SLBM은 단순하게 그냥 폭탄을 싣고 가서 터트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핵미사일이 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미사일이 되려면 북한이 또 다른 핵무기, 핵폭탄 소형화와 여러 가지 핵폭탄을 제조하는 필요한 또다른 기술이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을 잠수함인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고래급 잠수함은 2000톤급의 재래식 잠수함으로, 이는 SLBM 한 발을 실을 수 있는 정도로 그 자체로서 아직 그렇게 큰 위협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도 3000톤급 이상의 더 큰 잠수함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것 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번 SLBM 발사를 ‘사실상 성공’ 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고 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SLBM은 개발과정에 있다고 평가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SLBM은 구소련의 R27 모델을 모방했는데 구소련도 최초로 SLBM 비행시험을 성공하고 나서 그 이후에 10번 이상의 시험 발사를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성, 정확성, 신뢰성을 가지려면 아직도 10번 이상의 시험을 더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라미경 순천향대 교수** : 그렇긴 하지만 간단하게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이 6월 22일 무수단 미사일 발사 이후, 미사일의 발진 정도를 봤을 때 10번 정도의 안전성 문제가 있더라도 연내에 만약 SLBM의 실전배치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급선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진무** : 미사일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이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핵탄두를 장착하고 핵탄두를 폭파하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이 아직 북한의 핵 개발에 남아있는 부분이고 또한 잠수함은 지금은 SLBM 한 발을 장착할 수 있는 고래급 잠수함입니다. 그리고 그 잠수함의 성능은 기존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디젤잠수함으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수증작전을 하고 물위로 떠올라야 되는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 문제도 SLBM이 실전 배치되려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핵폭탄의 완성도를 높였지만 아직 완성하여 실전 배치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 **라미경** : 북한의 핵문제를 큰 틀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거나 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를 할 때마다 우리 정부는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전전긍긍합니다. 이번 SLBM이 실전 배치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북한의 도발행위가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는 점이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서 수세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세적인 차원으로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연구실장

●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

연구실장 : 최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보다는 중단거리 미사일이나 SLBM을 발사하는 것은 과시용보다는 실전 배치를 염두에 두고 체계적,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배치는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바로 실전배치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한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주일미군 기지, 심지어 괌에 있는 미군기지에 대한 공격능력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가 됩니다.

또한 북한은 미국의 상황이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과도기라는 점을 이용해서 핵무기 운반 수단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위상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 미사일, 실전배치 오래 걸리지 않을 것

● **김영수** : 북한의 SMBL의 발사 성공이 의미하는 것 중 중요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습공격, 핵 탑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결국 우리의 대응능력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여러 가지 혼란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방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 **박형중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장** : 북한은 핵실험을 할 때마다 핵능력과 핵사용 교리를 발전시켜 왔다고 생각합니다. 2차 핵실험을 하고 나서 비핵화를 거부하고 핵 국가로서 북미평화협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차 핵실험 이후에 외교적인 교리를 바꾼 것이지요. 3차 핵실험이 2013년 2월인데 3차 핵실험 이후에는 군사체계 개편에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북한의 행동 중 상당히 많은 것들이 2012년에 계획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략군이라든지 방사포 개발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사이버능력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2012년에 계획이 된 것입니다. 또한 2012년부터는 통일대전을 이야기하고 무력통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통일정책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하면 김정은이 통일대전, 즉 남북간의 전면전을 상정한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 핵실험 이후에는 핵무기와 북한의 재래식 또는 비대칭 능력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가 북한 정책의 핵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4차 핵실험 이후에는 핵사용 교리, 핵선제공격 교리를 현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사용해서 미군의 접근을 방해할 것이고 공격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의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그 교리와



김흥규
아주대 교수

능력을 과시하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5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북한의 발전된 능력과 발전된 교리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에 집중해서 단발성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단발성 대응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의 위협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예견하고, 가능하면 선제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매우 단발성으로

체계없이 대응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협에 지나친 조급증 보일 필요없어, 대응할 능력 갖춰야

● **김흥규 아주대 교수** : 북한은 아주 오랫동안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그와 관련된 준비를 계속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SLBM 같은 경우도 1 ~ 2년 사이에 준비한 것이 아니고 대단히 오랫동안 기술들을 축적시키는 과정들을 거쳤다고 봅니다.

국제정세에 대한 중장기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이 한반도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주요 견제수단을 확보해야겠다는 것, 그리고 가능하면 미국을 압박해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고려하게 하는 주요한 수단으로써 핵능력을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박형중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대단

히 수동적이고 대응적인 양상에 그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최근에 핵잠수함 배치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우려가 있습니다.

잠수함으로 잠수함을 견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핵잠수함 보유가 현재 북한의 SLBM 위협에 적확하게 대응하는 것인가 하는 점에도 상당한 회의가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야기할 수 있는 파괴적인 위협성에 상응하는 우리의 공격 역량을 갖출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북한에 대한 대비역량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위협에 너무 압박을 받아 지나치게 조금증을 보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SLBM을 실전 배치하고 이것을 운용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전배치는 북한에게도 상당한 비용과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조금 더 거시적으로 남북 간의 군비와 경제, 역량, 그리고 이것들의 운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 **김진무** : 북한의 미사일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구소련 붕괴 후, 소련의 러시아 미사일 기술자들이 대거 들어왔고 그 중에는 SLBM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노동미사일이나 무수단미사일은 구소련의 SS-N-6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모델입니다. 북한에는 아직 그 기술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SLBM 개발 자체가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SLBM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하는 것

은 맞습니다.

사실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에 대한 대비 개념은 발사 징후가 보이면 선제공격하는 것과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 그 두 가지 군사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데 SLBM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상에서 발사되는 모든 미사일은 우리가 가진 정보 자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할 수도 있고, 또 날아오는 미사일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개발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킬체인 시스템이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PAC-3 등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LBM의 경우 수중으로 은밀하게 침투해서 남해나 동해에서 어디든지 쏠 수 있어 현재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Kill Chain과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가동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9월 21일 평택 오산 공군기지에 착륙 중인 미군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



핵잠수함처럼 방어와 보복을 동시에 망라하는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잠수함을 통해 우리도 방어보다는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밀하게 들어오는 북한의 SLBM 잠수함을 탐지, 추적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잠수함을 격침시키거나 잠수함의 위치를 파악해서 미사일을 쏠 때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를 가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핵추진 잠수함 등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아직은 SLBM을 방어하기 위한 개념이 정립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수석** :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핵잠수함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저는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물론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볼 때, 핵잠수함 건조 또는 배치가 한반도 비핵화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라든가 패트리엇(Patriot) 미사일체계는 방어용이거든요. 하지만 핵잠수함은 방어용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일종의 공격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핵잠수함처럼 방어와 보복을 동시에 망라하는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잠수함을 통해 우리도 방어보다는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압박차원에서 선언적으로라도 핵잠수함을 건조



라미경
순천향대 교수

하고 배치하는 것을 밝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흥규** : 저는 핵잠수함 보유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입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재화 속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핵잠수함을 갖는 것이 얼마나 비용대비 효용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

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북한이 주도하고 우리는 대응하기에 바쁜, 현재의 구조로는 절대 북한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북한이 잠수함에서 SLBM을 쏘서 우리를 공격할 정도면 전쟁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북한이 훨씬 더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확신을 안겨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것을 잠수함 대 잠수함, 혹은 북한의 SLBM 공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급급해서는, 북한의 프레임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 **라미경** : 2003년 노무현 정권 시기에 종합적인 방어시스템이라고 해서 362사업이라는 핵잠수함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포커스가 방어시스템 쪽으로 가고 있는

데 과연 협상과 대화 채널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계속 치킨게임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고 하는데 대화채널도 같이 만들어가는 방안도 포함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대북 제재 국면에서 대화는 잘못된 신호 줄 수 있어

● **이수석** : 현재와 같은 대북제재 국면에서 북한과의 대화는 자칫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체제의 변화를 모색하고 비핵화 회담으로 나오도록 유도할 때입니다.

● **박형중** : 전체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증강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기를 어떻게 방어하고 공세능력을 키울 것인가 하는 군사적 대응에 대해서만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군사적 능력뿐만 아니라 외교적 측면에서도 그 파장을 예측하고 대책과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사드 배치 문제는 군사적인 측면을 떠나 외교적 파장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기본적인 전략 중에 하나는 한·미·중 간의 안보딜레마를 강화시켜 서로 의심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핵잠수함 보유나 한반도 핵무기 배치 문제 등은 모두 외교적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외교적인 측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 북한의 입장에서 기본적인 전략 중에 하나는 한·미·중 간의 안보딜레마를 강화시켜 서로 의심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을 일으킬 때마다 한·미·중이 협력해서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불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북한은 이것을 가지고 계속 꽃놀이패로 쥐고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에 대한 예측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 **김영수** : 이 문제와 관련하여 결국 우리 사회의 내부 갈등을 극대화하겠다는 북한의 대남 전술전략이 먹혀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전술을 어떻게 무력화시키고 우리 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 **김진무** : 사실 우리 정부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일부 세력들이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물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는 부분이 있는데, 북한의 선전선동 내용에 대해서 통일부 등 관계부처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작년 목함지뢰 도발 때 북한이 ‘우리민족끼리’ 라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남한 인민들이 전쟁을 피하기 위하여 사재기를 한다든지, 공항으로 탈출하고 있다는 등의 동영상을 내보냈다가 우리 국민들의 웃

음을 샀던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선전선동은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하고 감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북한에 의한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 문제는 정치적이고 민감한 사항이지요. 왜냐하면 정부 차원에서 하는 여러가지 정치적 행위가 반대측에서 비판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도 나뉘지는데 북한의 선전선동은 그 틈을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정부 정책의 공정성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장

● **김홍규** : 국내적으로 모범 국가를 만드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는 대외정책 비용을 크게 줄여줍니다. 민주주의는 국내 정치 비용을 축소하는 데 있어서 인류가 현재까지 고안한 가장 중요한 기제입니다. 민주정치 체제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원칙, 이념에 대한 확신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적 기제, 그리고 민주적 정책 결정이 지니고 있는 안보적 효용성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20세기적인 상황에서는 국가나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정보를 독점하고 독점된 정보를 바탕으로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정보화의 시기, IT시대에는 개인들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보 획득이 가능합니다. 정책결정자가 납득할 만한 수

준의 민주적 절차를 결여한 채 정책결정을 하면서, 일반화된 정보의 수준에 미달하는 정책을 집행하려 할 때, 그 정치적 비용은 막대합니다.

북한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신뢰하는 민주사회의 강점을 잘 살려야 합니다.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고, 합당한 정책결정이 이뤄진다면 독재사회가 가질 수 있는 일방적인 정책결정이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 비용을 크게 줄여줍니다. 이 점이 북한을 훨씬 더 압도할 수 있는 우리의 무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설득하는 노력 절실해

● **이수석** : 이번 사드배치 문제로 인해 우리 사회에 많은 갈등과 유언비어가 생겨났습니다. 전자파 유해라든가 미국의 MD체제 편입이라든가 하는 과장된 의견이나 표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외교·안보적 사안뿐만 아니라 모든 국내 정치·경제적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발생하는데 김진무 박사가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사실들을 우리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적 합의를 위해 공청회와 같은 기회도 많이 만드는 등 정확한 사실(fact)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설득하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라미경** : 저는 시민사회에서 토론의 장에 3만 여명의 탈북자들로 하여금 안보나 북한의 위협을 적극 알리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만큼 그 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체감한 사람이 없을 것 같거든요.

● **박형중** : 우리 사회의 갈등은 남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 있고, 갈등의 원인 중에는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 하는 것과 매우 관련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부 정책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받아들일지냐는 것인데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정부 정책이 옳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반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정책결정과정의 정당성과 그 과정에서 내린 권위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일지냐는 기본적으로는 정부 여당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남북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민들도 수용할 수 있고 갈등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전문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지식의 권위라고



9월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하는 것인데요. 전문지식의 권위를 전문가들이 스스로 떨어트린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안 믿는 것이지요. 전문가들도 자신의 권위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북한의 대남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2016년 이후로 상당히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양건 비서가 죽고 나서 김영철이 대남정책 책임을 맡게 되면서 금년에 통일연석회의와 같이 효과와 상관없이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는 것에도 대비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 **김영수** : 사실 북한의 실상을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너무 약합니다. 얼마전 ‘태양 아래 Under the Sun’ 영화를 보신 분이 ‘북한이 이런 곳이야?’ 라고 하시면서 ‘이것만 알면 우리끼리는 별로 싸울 것이 없다. 북한을 내가 사는 사회랑 조금 다른 사회인 줄 알았는데, 진짜 많이 다르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어떤 면에서는 ‘태양 아래’가 진실은 아니겠지만 진실의 한 부분을 보여주려고 애썼던 영화라는 점에서 이수석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fact)을 좀 더 알면 갈등의 폭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수석** : 북한의 대남 전략전술을 보면 첫째, 대남 위협 및 압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북한에 호의적으로 방향을 돌리게 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해 반대하게 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 대남 평화공세를 통해서 우리가 북한의 주장에 자연스럽게 동의하면서 정부 정책을 전환시키려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립적인 생각을 가진 대다수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정부의 전략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사이버를 통해서 혹은 최근 북한이 재개한 난수표를 활용해서 한국 내에서 북한의 견해에 동조하는 단체들에게 지침을 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관련 민간단체 등에서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만, 아직은 그런 면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 **김진무** : 강정마을의 제주해군기지가 이미 완공되었지만 아직도 그 앞에는 ‘평화, 전쟁이 없는 나라’ 라는 구호를 걸고 해군기지 철폐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SLBM을 쏘고 핵실험을 하는 등 전쟁 위협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북한의 위협적인 태도와 사드문제로 인한 심각한 사회갈등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정부 정책에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는 바꿀 수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중립적인 생각을 가진 대다수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정부의 전략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지요. 또한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오게 되면 정부는 위기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발동해야 합니다. 즉 천안함 직후 우리 사회 갈등이 극에 달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정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문제가 결국

사회의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이지요.

이번 사드문제를 보면서 우리 정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강화하여 중립적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의 공감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강력한 대북 제재를 전개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도 있고 아직도 미미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과연 대북 제재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71주년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땅의 평화는 물론,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고 밝혔다.

대북 제재로 북한 권력구도에 불안정성 나타나게 될 것

● **이수석** : 제재를 한다고 하면 당장 어떤 효과가 나타나서 제재를 받는 해당 국가가 혼란스럽고, 국민들이 시위를 하고, 정부가 무너지고 그래야만 제재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사회가 특정국가에 대한 제재를 시행할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찰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또한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 봐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국제정치를 보면 제재라는 것은 10년에 걸쳐서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니카라과나 이란의 경우도 오랜 기간 제재를 받으면서 그 나라 국민들 스스로가 이 정부, 이 체제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어 투표나 다른 의사방식을 통해서 정부 성격을 변화시켰습니다.

지금 북한은 큰 혼란이 생기지 않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도 견재해 보이기 때문에 제재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제재효과는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김정은 정권의 비자금 축적이 곤란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충성의 자금’ 상납 압박 등으로 김정은 주변의 사람들과 당·정·군의 엘리트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군부를 보더라도 각 군대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소나 공장이 대북제재로 인해서 수출입 등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군수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 장교들이 월급 외에 무역 거래를 통해서 생활비와 생필품을 조달해왔는데, 이것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불만들이 많다고 합니다.

할당된 외화별이 상납금을 채우기 위해 당과 정, 군 엘리트들이 이권 사업을 놓고 상당한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권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과거에는 개인 간의 권력 갈등이었다면 지금은 기관간의 갈등으로 변지고 있어 향후 북한 권력구도를 보면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불안정성이 매우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라미경** :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UN 제재 2270호가 발의된 이유는 북핵문제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재효과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중장기로 나타나지만 대북제재 이후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집단 탈북이나 태영호 공사와 같은 엘리트 탈북은 이전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가는 과정에서 체제가 바뀔 때마다 초기에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비군사적 제재 이후에 그 효과가 경제적 부분이나 무역 등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한 군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탈북문제에 있어 엘리트 탈북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통계 수치를 보게 되면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는 탈북자 숫자가 늘지 않았어요. 통계로 보게 되면 2011년에 2,706명 정도였던 것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오면서 계속 1,500 여명으로 줄었고 2015년에는 1,276명, 2016년 상반기에 825명으로 수적으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 **이수석** : 일반 탈북자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고위 엘리트 탈북자들이 많이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출신 배경을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군부나 당 출신 인사들이 많이 탈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그 사람들의 신원이나 안전 문제 등으로 공개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5년이 되어가는 김정은 시대 동안 당·정·군의 엘리트 탈북자들 숫자는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김영수** : 두 분께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고위층 탈북이 늘어난 것은 장성택 숙청 이후에 후유증이 컸기 때문이고, 2007년과 2008년에는 중국 체류에 10년이 넘으면 정착금을 안 준다는 소문이 확 퍼지면서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탈북한 태영호 공사와 그 가족이 머물던 런던의 주영 북한 대사관의 모습



**유엔 안보리 제재 시행 이후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대북제재 효과가 있느냐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부터는 중국에서 들어올 사람은 대충 다 들어와서 지금은 적어졌고, 김정은이 철저히 국경통제를 하면서 도강비용이 세 배씩 오르기도 했습니다.

대북제재의 대부분이 경제제재, 단기간에 효과 어려워

● **김진무** :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UN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는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를 비롯하여 한국, 미국, 일본, EU 등 개별 국가들이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 안보리 제재 시행 이후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대북제재 효과가 있느냐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대북제재의 대부분이 경제제재인데 그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북한이 그 제재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일부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지난 3월 안보리 대북제재가 시행되고 난 직후 북·중 접경지역의 경제활동이 잠깐 위축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 이후 다시 복원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런 현상이 사실은 제재효과가 있긴 있지만 북한이 여러 방면에서 제재를 빠져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대북제재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이 핵개발을 못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기술적인 측면과 핵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부품을 들여와서 핵을 완성하는 그 부분에 대해 제재를 가해서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북한 경제 전반에 제재를 가해서 김정은의 핵개발 의지를 꺾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목적 모두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최근 북한 상황을 보면 제재가 작동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재 그 자체가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는 판단이 드는 것입니다.

최근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이행정도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이 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하지



9월 8일 노동신문이 공개한 북한의 '탄두 개량형' 노동미사일. 왼쪽 사진은 지난 7월 19일 발사 당시 모습.

않고 있다고 보고 싶지는 않아요. 중국은 UN안보리에 이행보고서를 냈고, 그리고 대북제재 그 자체를 자기들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조항만큼은 이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북제재안 자체가 목적을 달성하기에 결정적인 결함이 많고 중요한 것은 생계형 무역을 허용하면서 북한이 그것을 이용하여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한 2270호를 미·중간에 합의할 당시 세컨더리 보이콧, 석유 금수 등 북한에 치명적이 될 수 있는 조항들이 최종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북한의 대외경제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북제재는 대부분 공식 무역이나 공식 경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대외경제의 상당 부분이 북한과 중국 간의 밀무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밀무역에는 제재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오랫동안 제재를 받아오면서 다양한 회피 수단을 강구해 왔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로 인해 결국은 대북제재 영향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가 미미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렇다면 대북제재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결국 정부의 정책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지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 **김흥규** : 제재와 관련해서 김영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



북한의 대외경제의 상당 부분이 북한과 중국 간의 밀무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밀무역에는 제재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오랫동안 제재를 받아오면서 다양한 회피 수단을 강구해 왔습니다.



지도부 자체가 느끼는 국제사회와의 어떤 불편함, 대외적 위신의 추락, 정권의 스트레스 증가, 그리고 핵과 미사일 부품의 조달 차단, 저는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가져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압력들이 실제 북한 붕괴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자꾸 그러한 방향으로 모든 정보들을 연결시키려고 하니깐 거기서 오는 괴리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제재만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제재가 성공적으로 가해졌을 때 무력충돌로 전환되는 상황이 더 빈번합니다. 무력충돌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현 상황에서 제3자의 개입은 중국을 생각할 수 있지만, 사드 문제에서도 보듯이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중국을 활용할 수 있는 준비와 역량, 그리고 전략적인 복안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김진무 박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중국은 적어도 UN 제재, 자신들이 약속한 것에 관해서는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UN제재가 포괄하지 못하는 제재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동북3성과 북한주민들과의 현실적인 필요로 인한 북중 교역의 자연스러운 증가는 계속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북제재 자체에 대해 너무 지나친 목

표나 기대를 갖는 것은 금물이라고 봅니다. 기대치의 차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가 바로 국민적인 갈등으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재가 갖는 현실적인 목표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 수준 높은 포괄적인 판단이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가져오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이것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결합되면서 왜곡되고 국민적 갈등으로 번지게 되어 오히려 객관적인 실태나 분석보다는 정치적 당파성의 의해 결정되는 문제점을 우리가 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형중** : 아까 김진무 박사님께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북제재에 관한 논리도 선거운동 하듯이 하면 좋겠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때는 실제 자기 의도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요. 동조자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도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많은데 가능하면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힘을 모을 수 있는 것을 설정해서 우리의 의도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가능하면 국민의 다수가 정부에 힘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야기하는 것과 행동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뵙니다. 행동은 치밀하고 치명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은 굉장히 세게 하면서 행동은 치밀하지 못하고 치명적이지 못하게 되면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점을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제재는 북한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 지나친 기대는 금물

● **김영수** : 대북제재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찾는 것이 어려운 점입니다. 저는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제재를 받고 있다는 것을 빨리 알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주민에게 이 소식을 알리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으면서 우리만 제재를 더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노동신문이 9월 20일 북한의 '신형 로켓엔진 분출 시험' 사실을 공개한 가운데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분출 시험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 **김진무** : 대북제재가 효과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비롯해서 각국의 제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을 면밀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가까이 있고, 탈북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UN안보리에 대북제재위원회가 있지만 사실 우리처럼 정확히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로 대북 제재의 효과를 원한다면 생계형 무역 문제나 밀무역 등 여러가지 제재 회피수단들을 정확하게 규명해서 우리 정부 자체적으로 백서를 내고 국제적으로 홍보하여 국제사회로 하여금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보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사회의 지지와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의 대북정책이 제재 일변도라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강하게 심어주



북한이 8월 24일 오전 5시 30분께 동해상에서 쏜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구름을 뚫고 흰 연기를 뿜으며 날아오르고 있다.

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재는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따라서 제재와 핵 위협은 물론이고 남북관계 개선 등이 모두 포함되는 대북정책의 큰 그림과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수석** : 북한체제의 변화 유도나 대북정책에서 있어 제재와 대화 두가지 방법 모두 사용하면 좋지만 우리만 대북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통적으로 대북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북한에 대해서 다른 정책을 펴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유엔 결의 2270호와 같은 대북제재 결의는 우리가 주도해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통과시켰고 중국이나 유럽연합과 같은 국제사회에 대해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이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한과 대화라든가 다른 방식을 모색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입니다.

지금은 UN결의안에 충실해서 제재에 몰두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재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협력국가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8월 말까지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들을 보면, 전체 UN 회원국 중에서 중요한 국가들은 제재 이행보고서를 대부분 제출했습니다. 아직 제재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한편, 제재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관리·감독하는 자체적인 평가위원회라든가 국제사회와의 공동협력기구 등을 통해 대한민국이 제재에 대해서 매우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더 많이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흥규** : 이와 관련하여 덧붙인다면, 만약 지금의 논리대로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제재를 관리·감독하고 강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다른 나라를 계속해서 독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쁜 행동에 대한 제재는 분명히 해야 되고, 다른 주요 국가들도 그 점에 있어서는 모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재는 계속 유지하되 동시에 북한을 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혹은 전략적인 노력을 우리가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 **김영수** : 동북아 정세가 어떻게 변화해 갈까요?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우리는 외교와 안보협력에 있어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의 안보구도를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드문제로 북·중이 더 가까워질 것이라는 것은 우려일뿐

● **김흥규** :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사드 국면에서 많은 분들이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구도의 형성을 우려해 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실체는 한·미·일 대 북한 그리고 중·러의 삼각구도가 형성되었다는 것이 더 현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또한 중국 측에서 사드문제로 인해 북한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많은 주장들이 제기되었지만, 실제 드러난 바로는 중국은 북한에 연루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점입니다. 북한 역시 이 기회를 활용해 중국과 연합하여 한국을 압박하기보다는 자신의 핵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

가면서 독자적인 외교안보정책을 추구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제각기 약진하는 모습이 오히려 북핵 4차 핵실험 이후 사드국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드문제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또한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박형중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북핵의 역량이 공격적으로 강화되고 있고,金正은이 추구하는 새로운 통일대전 전략들을 우리가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을 보호하고 후방기지들을 보호하는 분명한 조치들을 취해야 합니다. 문제는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드가 중·러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아태 재균형전략이 적극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의 입장에 전도되지 않도록 견제하면서, 그들의 안보적 우려를 반영하고, 동시에 우



박근혜 대통령은 8월 24일 중부전선부대를 방문하여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해 줄 것"을 당부했다.

리의 안보를 확보하는, 그리고 미국의 이해도 동시에 들어주는 절묘한 접합점이 어딘가 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한미가 현재 합의한 것처럼 ‘사드의 한반도화’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사드는 북한의 공격에 대한 방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드를 한반도화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내고, 미군의 인력이나 시설과 우리의 군사시설에 대한 보호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미국에게는 북한으로부터 오는 미국에 대한 위협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고 보호하려고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던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이자면 최근 들어 중국으로부터 한국과 타협하기를 원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여전히 깨고 싶지는 않다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오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런 signal을 제대로 읽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전략 대화를 통해 기술적인 절충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 간에 체면을 살려주면서 각각의 이해를 어느 정도 달성하게 해주는 그 접점을 찾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라미경** : 저는 한·미·일과 북·중·러라는 관계 중에서 일본의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의 입장에 전도되지 않도록 견제하면서, 그들의 안보적 우려를 반영하고, 동시에 우리의 안보를 확보하는, 그리고 미국의 이해도 동시에 들어주는 절묘한 접합점이 어딘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주평통 시카고협의회는 9월 23일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했다.

역할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대북제재 효과를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를 통해 접근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프레임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보는 중국이 그다지 북한의 핵문제를 갖고 달가워하지 않고 시진핑 정부가 안고 있는 국내외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안정적 위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직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 문제가 해결이 안 났습니다. 일본의 군사정보가 한국에는 필요하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의 무수단미사일과 더불어 SLBM 문제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핵무장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일본과의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이번 정부가 추진해서 협정을 체결하고 한·미·일 공조체제를 좀 더 돈독히 해야 된다는 것

이지요. 물론 거기에는 위안부 문제라고 하는 장애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2015년 12월 28일에 위안부 문제가 타결이 됐고 그런 정서적인 것과 조금 다르게 우리가 외교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일본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맺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 대북제재와 더불어 우리 정부의 갈 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사드배치 반대에 대해 너무 우려하기 보다는 전략적인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과 SLBM, ICBM 미사일 발사가 지속된다면 일본은 국가안보를 위해 전술핵 문제와 더불어서 핵무장을 고려하게 될 텐데, 일본의 핵무장을 가장 꺼리는 국가는 중국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중국은 현재의 상황, 즉 미·중간의 갈등구조와 한·일의 군사역량 강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북한의 입장만 고려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중국이 당면한 딜레마입니다.

또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될 경우 이전처럼 중국과 가깝게 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전술핵을 갖고 핵무장을 하게 될 경우 북한의 행태가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가깝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 문제에 대해 조금하거나 초초해 하지 말고 의연하고 맺집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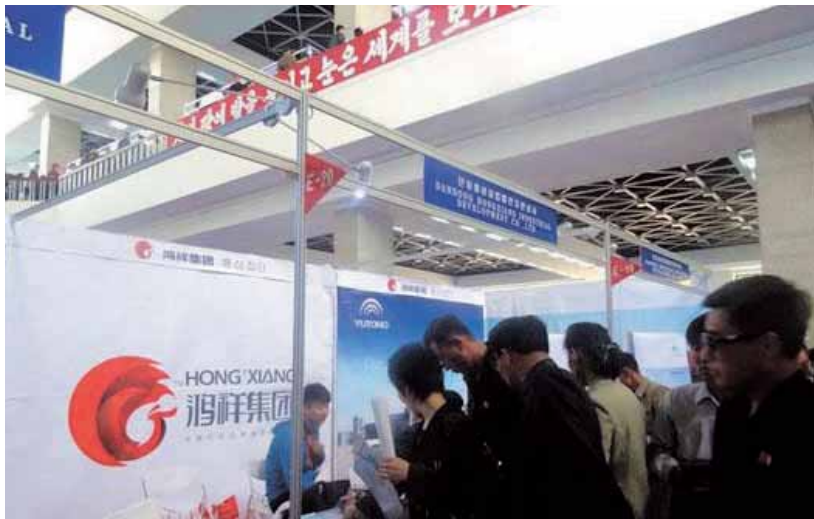
중국, 북핵문제에 급급하지는 않지만 신경 쓰고 있어

● **이수석** : 중국은 북핵문제에 관해 우리와 입장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북핵 문제는 사활적이고 심각한 문제인 반면, 중

국 입장에서는 북핵문제가 우리보다는 덜 심각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등 핵 무장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도나 파키스탄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왔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와 달리 북핵문제를 급박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핵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흐름과 같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중국은 세계의 G2 국가로서의 지도적 위상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도덕성과 명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사회 흐름에 동참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북핵문제로 인해 한국, 일본을 포함해서 주변국가들이 핵무장을 추구한다든가, 군비강화로 이어져 중국의 안보를 침해할



미국에 의해 북한 핵개발을 지원해온 증거들이 포착된 홍상그룹에 대해 미국 정부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처음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평양에서 열린 박람회 홍상그룹이 참가한 모습.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두 번째 이유와 유사한데,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로 중국을 포위한다든가, 서해에서 미군의 군사능력이 강화되고 활동반경이 확대되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중국은 북핵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설득하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예컨대 사드 같은 경우는 어느 한쪽이 손해보고 이익을 보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닌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논제로섬(non zero-sum) 게임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득해야 합니다. 모두가 합의하고 얘기가 통하면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문제임을 중국에게 이해시켜야 합니다.

중국은 사드문제에 대해 지금은 굉장히 민감해 하고 여러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한·중간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



박근혜 대통령은 9월 14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사드배치 후보지 결정에 관해 설명했다.



중국이 사드에 대해 한국에 강한 압박을 하게되면 결국 한국의 반발을 사고 한·미·일 결속이 강화되어 오히려 중국이 전략적으로 더 불리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등 북핵 문제는 중국에게 전략적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만 들고 있습니다.



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과격한 태도는 누그러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사드 문제나, 한·중간의 정치·경제적 문제는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홍규** :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중국 측이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 갖는 우려가 더 크고 강하다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중국은 북한이 그래도 집토끼라는 생각이 강했는데 지금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서는 집토끼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김일성 체제 속에서의 북한을 추구한다면 중국의 많은 전략가들은 중·소분쟁 시기의 북한의 외교를 떠올릴 것입니다. 예전 북한이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박쥐외교를 한 것처럼 이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핵을 가진 북한이 그런 외교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유사시 중국이 과도한 압박을 가했을 경우 핵을 가지고 오히려 중국을 협박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중국의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과거 시기에는 적어도 북한이 아무리 위협, 협박, 공갈을 해도 실제 문제를 야기시키지는 않

을 것이라는 생각이 강했던 반면에, 김정은 체제에서는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생각보다 커지는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북한의 상대적 자율성이 점점 커지는군요. 그러면 이제는 오는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변수나 김정은의 방중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북핵문제가 중국을 전략적 딜레마에 빠트리고 있어

● **김진무** : 이 질문에서 대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김정은이 핵무기의 실전배치를 위해 앞으로도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 카다피 몰락을 본 김정일이 생전에 후계자인 김정은에게 ‘네가 살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핵을 실전배치해야 한다’ 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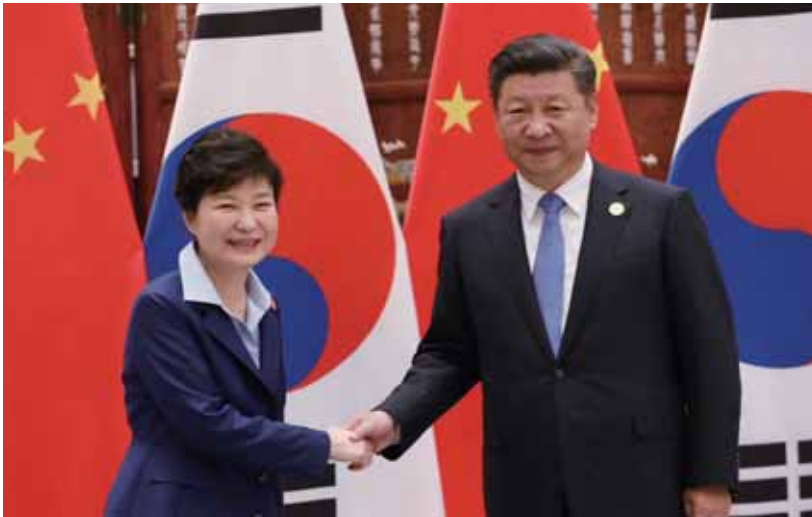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떤 제재나 압박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김정은은 마이웨이로 그냥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중국의 전략적 딜레마를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핵문제 그 자체로서의 위험성도 물론 있지만 북핵문제로 인해서 사드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결국 미국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이 확대되고 한·미·일 결속이 강화되며 중국 포위전략이 강화되는 효과를 낳았다는 말이죠. 그 원인이 바로 북핵 문제입니다.

또 한가지는 중국이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한국에 강한 압박을 하게 되면 결국 한국의 반발을 사고 한·미·일 결속이 강화되어 오히려 중국이 전략적으로 더 불리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등 북핵 문제가

중국을 전략적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중국과 전략 커뮤니케이션을 강화, 확대하여 많은 대화를 통해 서로 간에 이해를 높이고 신뢰를 쌓아가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중간에는 다양한 대화채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과의 협상이나 대화에서 우리가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이 한미동맹 문제입니다. 미국과 결속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대중국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에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대화는 첫째, 한미동맹의 강화를 바탕으로 하고, 둘째, 중국의 전략적 딜레마를 잘 읽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9월 5일 G20 정상회담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항저우 시후 국빈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후 악수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미·중 사이에서 좋게 좋게 풀어나가려고 하다가 압력을 가하면 변화하게 된다는 인상을 주면 오히려 또 다른 압력을 자초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박형중** : 배짱과 뱃심이 있으려면 전략적 사고능력이 탁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전략적 사고능력을 외교행위로 바꿀 수 있는 독자적 행위능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략적 사고와 독자적 행위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 인지가 핵심적인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면한 동북아 정세는 북한의 핵 무장으로 인해 안보딜레마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사드문제가 생겼고 5차 핵실험을 한다면 더 큰 것이 들어오는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 정세가 상당히 불확실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전체적으로 크다고 보는데 독자적 행위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문제가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경제가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면 대 중국 경제 의존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발언권이 강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미국에 지나치게 안보의존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대한 경제환경을 철폐할 수 없듯이 미국에 대한 우리의 안보환경을 철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바탕으로 하되 안보, 외교분야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미·중 사이에서 좋게 좋게 풀어나가려고 하다가 압력을 가하면 변하게 된다는 인상을 주면 오히려 또 다른 압력을 자초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압력에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압력을 계속 불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압력을 주면 바뀐다는 식의 인상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전략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전후에 북한 도발 가능성 있어

● **이수석** :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은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에 는 곤란한 시기로 대부분 모든 정책을 유보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도발해도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기가 곤란한 입장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클린턴이든 트럼프든, 누가 되더라도 차기 미국 정부에서는 북핵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북한은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핵보유국이든 운반수단이든 기정사실화하고 싶은 생각이 많을 것입니다.

과거에 미국이 제네바 합의라든가 이란 핵합의와 같이 다른 나라와 합의하는 것을 보면, 항상 군사적 제재가 고강도까지 갔다가 막판에 극적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북한을 다룰 때 대화는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북한을 압박하면서 고강도의 군사적 옵션까지 고려하는 대북제재까지 가고 그 이후에 극적인 합의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 전후에 북한의 도발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북한의 추가 도발 시, 국제사회와의 협력에서 좀 더 고강도 대북제재를 이끌어 내고 그 이후에 비핵화 대화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진무** : 지난해 10월 10일 중국 공산당 류윈산 상무위원이 당 창건기념일에 북한에 왔을 때 김정은의 방중 문제가 거론됐었는데 북한이 1월에 핵실험을 하면서 물 건너 갔던 적이 있습니다.

김정은의 방중 문제는 앞으로의 핵 도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8월까지 보인 행태를 보면 핵실험과 미사일, SLBM 등을 계속 시험 발사했고 지금도 개발 과정 중에 있어 당분간은 이런 핵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도발 상황에서 김정은이 중국에 간다거나 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현황

미사일	사거리(Km)	탄두(Kg)	로켓	배치연도	보유 수량
화성-5호(스커드-B)	300	1000	1단	1988	600여기
화성-6호(스커드-C)	500	770	1단	1988	200여기
화성-7호(노동)	1300	700	1단	1988	50여기
화성-10호(무수단)	3500	650	1단	2007	?
화성-8호(대포동 1호)	2500	500	2단	1998(시험발사)	?
화성-9호(대포동 2호)	6700이상	650~1000	3단	2006(시험발사)	?
은하-3호(광명성 3호)	1만(추정)	100(추정)	3단	2012(시험발사)	?
화성-13호(KN-08)	9000~12,000(추정)	500(추정)	3단	?	

김정은을 불러들인다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당분간 김정은의 방중 문제는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흥규** : 저도 김진무 박사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제가 보기에 북·중 정상회담 개최문제는 현재 북한이나 중국 다 그렇게 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번 선거과정을 살펴보면, 대단히 상반된 두 가지 시그널들이 동시에 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에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고립주의 추세, 또 하나는 중국이 아직 충분히 부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태 재균형전략을 더 강하게 집행해서 미국에 유리한 국제질서 규범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욕구가 존재합니다.

이 두가지 모순된 정황들이 충돌하는데 클린턴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재균형 정책을 어떻게든 전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은 과거보다 훨씬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 공백의 국면에서 북한은 최대한 도발을 추진할 것입니다. 한반도 상황이 대단히 불안정해지고, 미국의 새로운 정권도 그 해답을 찾지 못하는 이 혼란스러운 구도 속에서 아마 중국은 다시 북·중 정상회담 카드를 고려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나 강한 압박보다는 타협을 위주로 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미 채널 가동은 항상 상수로 생각해야 합니다. 동시에 주한미군을 약화시키면서 주일미군 중심의 편제, 그리고 팜으로의 군사 역량 재배치와 같은 조

치들을 고려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게는 상당히 도전적인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강한 압박보다 타협 위주의 전략 구사할지도

● **김영수** : 아까 박형중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을 증강시키지 않는다면, 전략적 사고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에서 SM-2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것 같습니다. 얼마전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사건을 계기로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것이 아닌지, 체제 균열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지 등의 의견이 분분한데 이 시점에서 북한 정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박형중** : 첫 번째로는 안정성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김정은이 통치그룹을 재편했습니다. 다

만, 새로 만들어진 통치그룹이 얼마나 견고한지, 이것이 시험대에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안정성의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경제여건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제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중국 경제의 하향과 국제 광산물 가격의 하락입니다.

북한 경제는 자체 내부 생산력으로는 정권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화벌이 원천을 찾아서 움직이는데, 현재는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지난 4~5년간은 석탄을 수출하여 쉽게 외화벌이를 할 수 있어 경제가 안정되고, 권력세습 과정도 순탄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면, 지금부터는 외화벌이 원천으로 확실한 것이 없을뿐더러 세계경제도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납 압력의 증가, 또는 수탈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의 대외정책이 대단히 공격적이고 도발적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주변국들의 반대 압력을 스스로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북제재나 인권문제, 8·25 합의 때처럼 북한이 불장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못 관리하면 북한이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북한체제의 불안정 요소, 위험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 **라미경** : 거기에 맞물려서 얼마 전에 있었던 북한의 김용진 북한 내각 부총리 처형을 보면, 7차 당대회 이후 본격적으로 김정은 체제가 작동하는 과정에 있어 공포체제를 통해서 1인 지배체제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포정치를 통해 지도층 인사들이 이탈하지 않게 하면서 충성심을 가지게 하는 유인작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진무** : 중요한 것은 최근의 고위 엘리트들의 탈북이 북한체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북한에 있는 엘리트들은 북한체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김정은의 공포정치나 통제 속에서 체제 안에 머물러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기가 이 체제를 벗어나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위 엘리트들의 탈북이 체제 염증에 의한 체제 불안정 신호라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 엘리트 탈북을 체제 불안정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

● **이수석** :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식, 비공식적인 방식을 통한 북한의 엘리트 포용정책을 본격적으로 실행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그들을 포용한다는 것을 확실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성공한 탈북민의 모범사례를 북한 엘리트층이나 간부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북한주민들도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TV나 영상물을 많이 보기 때문에 탈북민의 성공사례, 즉, 공무원이든 기업이든 문화예술인이든 성공한 사례들을 많이 발굴해서 북한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 **김진무** : 최근에 북한 주민의 성분조사를 해보면 핵심계층이 있고 그 다음 일반 기본 균중계층이 있는데, 그 사이에 또 하나의 대리인 계층이 있습니다. 바로 지배연합입니다. 독재자와 핵심 고위 엘리트들이 모여서 독재체제를 유지하는데 그 지배연합이 일반주민들을 감

시, 통제, 수탈하게 됩니다. 주민들을 감시, 통제, 수탈을 대리하는 대리인들이 바로 보위부, 검찰, 인민보안부 등의 소위 실무자 그룹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십 만명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 보면 어느 날 자고 일어나 세상이 바뀌면 자기들이 주민들한테 맞아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북한의 급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보낸다면, 그 대리인들에게 세상이 바뀌면 그들이 가장 먼저 처벌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대리인들은 통제, 감시, 수탈 등 부정부패 일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평양에 있는 고위층을 대리해서 부정부패는 물론, 감시와 수탈을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대리인 계층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 **이수석** : 동서독의 사례도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동독 출신 공산당원들도 통일 후에 성공해서 출세한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려 북한 엘리트들도 보복 청산의 대상이 아닌 통일한국에서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적극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식, 비공식적 방식을 통한 북한의 엘리트 포용정책을 본격적으로 실행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성공한 탈북민의 모범사례를 북한 엘리트층이나 간부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김영수** : 최근의 북한 핵문제와 안보와 관련한 핵심과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시각들이 다양하고 일부에서는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과 그 과정에서 민주평통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중** : 한국사회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이미지는 북한을 너무 가볍게 보고 과소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이미 망한 나라이거나, 금방 망할 것이고, 또金正은의 행동을 보면 올바른 판단력도 없는 것 같다는 식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의도나 행위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식으로 담론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북한이 금방 망할 것이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한다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처를 잘못하게 되고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9월 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중희 한국 차석대사와 서맨사 파워 미국대사, 벤티스 고로 일본대사(오른쪽부터)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긴급회의의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공동체에 대한 소중함, 민주체제에 대한 확신을 안겨 주는 것이 안보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왜 우리가 이 땅을 지키는지에 대해 자연스러운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적, 문화적으로 부강하다고 해서 경제·문화적으로 부족한 국가를 꼭 이긴 적이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군사적으로 당하게 되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북한을 너무 과소 평가하는 담론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보면 김정은이 등장한 이후에 김정일보다 김정은이 훨씬 더 어렵고 위험한 도전을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김정은을 김정일보다 낮춰보고 있습니다. 이런 담론이나 이미지 체계를 바꿔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홍규** : 우리 내부에서의 이질화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남북한 간에 두 국가 체제의 형상으로 자꾸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북한도 김일성·김정일 민족이라고 스스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핵 무장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 안보불안감과 불신이 점차 확대되면서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일반 주민들조차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가 통일을 추구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북한주민들과는 적어도 ‘우리’ 라는 인식을 나누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3월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공감 평화통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의 외교·안보·통일문제에 있어서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근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과 전략 운용, 타성의 만연 현상은 대단히 우려됩니다. 그리고 현대 무기체계에만 의존하려는 경향도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족 공동체에 대한 소중함, 민주체제에 대한 확신을 안겨 주는 것이 안보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왜 우리가 이 땅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자연스러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민주평통은 여야,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논의를 활성화하는 그런 구조가 필요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민주평통의 성격, 논의 구조, 구성원도 바뀌는 상황이라면 이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나가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좀 더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전문가

그룹 간의 논의를 활성화하여 다른 견해에 대한 관용성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체의 정책 제안 기능을 강화하고 대북 공공외교의 활성화 노력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평통은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기관’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강화해야 됩니다. ‘민주평통’ 하면 누구나 그 설립목표가 바로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이라는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주평통, ‘평화통일 추진 기관’으로서 정체성 강화해야

● **이수석** : 북한핵은 김정은 체제의 버팀목이자 최후의 보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핵문제를 북한의 체제변화, 김정은 정권의 개혁개방과 연관시켜서 해결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비핵화를 통해서 통일로 간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통일의 과정에서 비핵화를 해결한다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즉, 북핵문제 해결을 개혁·개방을 통한 북한체제의 변화와 연결시켜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통일의 길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요.

북핵문제는 통일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 국민적 통합이 북핵문제의 해결이나 북한체제의 변화유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북제재의 지속 상황에서 제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결집이 필요한 때입니다. 민주평통은 우리 국민들에게 유언비어에 휘둘리지 않는 정확한 실상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당위성 확보와 지지를

모이기 위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일문화 행사가 필요하고 이런 것을 민주평통이 주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해외 지역협의회를 통해 현지에서의 여론수렴이나 주류 사회와의 접촉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과 함께 통일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라미경** : 북한핵이나 안보문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이든 국민들에게 인식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북한핵과 안보라는 대명제 속에서는 이 문제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국민적 합의 문제는 이념적 갈등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는 9월 12일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위해 국제사회가 철저히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 해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공존방식 여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이념 갈등은 분단과 지속된 냉전문화 속에서 고착되어왔을 뿐더러 정치권의 배타적 대립구도가 협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핵과 안보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과는 달리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각 진영에서는 이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끊임 없는 설득의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단 그 전제는 정책적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형태로 여야 정치권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핵 안보 정책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안보문제를 둘러싼 남남갈등에는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변수가 동시에 개입되어 있고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갈등해소를 위한 처방들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를 둘러싼 우리 내부의 갈등 심화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의 실질적인 위협보다도 더한 위기감을 맛보게 했습니다. 설득의 과정들은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해야 하는데 전문가나 언론처럼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곳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민주적인 원칙과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에 기초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민주적 제도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민주평통의 역할은 국민적 합의 기반 구축, 공감대 형성, 국

론결집 등입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서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일들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해외에서도 초당적이고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많은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통일 및 안보 관련 강의와 강연, 교육, 세미나, 문화행사, 정책개발 및 건의활동, 핵실험과 미사일에 관한 대북 규탄 대회 등 대국민 접점지역에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국민의 인식은 그 노력에 크게 부응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주평통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통의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민주평통이 이런 것을 한다’는 외침이 아닌 운동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세부적인 ‘통일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노력, 내부적인 조직이 갖고 있는 한계를 스스로 극복하고 그것을 국민들이 인지하게 할 때 민주평통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우리의 이념갈등은 분단과 지속된 냉전문화 속에서 고착
되어왔을 뿐더러 정치권의 배타적 대립구도가 협력을 더
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핵안보는 사회의 제갈등과
는 달리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뉴욕 맨해튼 중심에 9월 26일부터 약 4주간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핵폐기를 주장하는 광고를 내걸었다.

통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 얻어내는 것

● **김진우** : 저는 북한 핵문제와 안보에 대한 국민의 인식 문제를 좀 더 미시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안보와 핵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를 언론으로부터 얻습니다. 언론은 국민들의 인식을 정립함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년 1월부터 핵·미사일, 당대회 등 북한 관련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현안이 있을 때마다 방송 매체들이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같은 내용을 주제로 장시간 동안 경쟁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핵 위협이라는 사안의 중대성보다는 마치 흥미 위주로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 둔감하



안보불감증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안보에 지나치게 민감한 것도 문제입니다.



게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핵문제가 한 20년 동안 계속 되다 보니 핵문제를 고혈압 같은 만성병으로 인식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일부 언론에서 지나치게 흥미 위주로, 하루 종일 반복해서 방송을 하다보니 받아들이는 국민 역시 흥미 위주로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안보에 둔감해 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안보불감증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안보에 지나치게 민감한 것도 문제입니다. 민감하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것이고 국민들이 불안하다는 것은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불안정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평통의 역할입니다. 사실 민주평통은 '북핵문제의 해법은 통일 밖에 없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의 통일대박론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통일이 우리가 안고 있는 청년실업, 고령화 그 외에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핵문제는 통일이 해법이고 민주평통이 그 전위부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으로 정권과 관계없이 영속되고 있는 기관입

니다. 통일관련 부처나 연구기관도 있습니다만,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평통이 통일준비를 위한 전위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기능과 공감대 형성과 같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민주평통이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영수** : 북한은 정권수립 기념일인 지난 9월 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북한은 이번에 새로 제작한 소형 핵탄두의 위력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대로라면 북한의 실전 핵배치가 멀지 않았고, 한반도는 핵무기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에 행해진 북한의 5차 핵실험의 의미와 향후 국제사회의 대응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무** : 우선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 언론보도를 통해 밝힌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언론보도를 통해 5차 핵실험에서 북한이 보유한 각종 미사일들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게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성능과 위력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핵탄두를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핵무기 병기화를 위한 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보도 내용을 있는 그대로 분석하면,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게 크기와 무게를 줄였으며, 스커드, 노동, 무수단 등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미사일의 규격과 모양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든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핵탄두를 규격화하였다

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병기화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핵무기를 실전배치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이 과거에도 자기들의 위협을 부풀려 발표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북한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미 5차례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핵폭탄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김흥규** : 이번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은 북한이 더 이상 비핵화와 관련한 어떠한 대화에도 관심이 없으며, 핵 무장국이라는 새로운 틀 내에서 국제사회와 대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사드 정국에서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합하여 한



미 등에 대항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여 독자적인 대외노선을 걷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과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실효성 있는 제재 국면을 창출할지는 회의적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섣범 역시 상황의 관리에 더 치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핵실험, 북한의 핵폭탄이 고도화됐다는 반증

● **라미경** : 이번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직전 6-7kt 보다 10kt으로 위력이 훨씬 강력해졌을 뿐만 아니라 핵실험 주기까지 빨라져 핵전력의 실전배치가 임박해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통해 내부동요를 차단하고 결속을 강화하면서 김정은의 통치기반을 강화하고 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실험의 시기를 고려해 보면 미국의 대선 정국에 주요 이슈로 부각시키려는 계산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사드배치 문제로 한·중관계가 악화되고 북·중관계가 점차 회복되는 시기에 중국을 자극하는 핵실험을 강행한 의도가 의문시 되는데, 북한이 북·중관계의 회복보다는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미국과의 전략적 고려를 염두에 두었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기존 대북제재의 추동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다 강도 높고 포괄적인 제재수단을 강

구· 적용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에 덧붙여 북한과 거래하는 업체 등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을 전면 확대하여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수조치의 확대, 세관검색 강화, 금융제재를 집중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북한에 대한 ‘비군사적 제재’ 가 북한의 변화에 한계가 있고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가 임박하다고 판단되면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해 ‘군사적 제재’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군사적 제재는 가능한 특정국가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우발적인 충돌 내지 확산 가능성을 방지하는 가운데 후속 상황 및 여건에 맞추어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붕괴 내지 정권교체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공개 거론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반도의 ‘바람직한 최종상태’ 에 대한 구상을 정립하고 적절한 시기에 대내외적으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수석** : 이번 5차 핵실험으로 김정은 정권은 북한체제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막다른 상황으로 끌고 간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 해에 두 번이나 핵실험을 한 것은 북한체제가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되기를 완전히 거부한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겠다고 선포한 것이지요.

5차 핵실험으로 김정은은 군사적 리더십을 크게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 내 홍수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도움을 청하고 있는 상태에서 핵실험을 하는 것은 북한 정치체제의 모순된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니다. 북한주민들은 핵실험에 대한 자부심보다는 정권이 경제를 돌보지 않는데 대한 불만이 더 쌓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5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위협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기에 국제사회는 과거와 다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북제재 2270호가 실행되고 있지만, 더 철저하고 완벽한 대북제재가 필요합니다. 2270호에서 민생항목이라고 제외되었던 부분을 더 철저하게 제재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대북제재와 압박을 철저하게 이행함으로써 북한의 핵능력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함과 동시에 체제변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민주평통 남미 서부협의회는 9월 18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시 아베자네다 거리에 북한 핵·미사일 폐기 관련 현수막을 내걸고 북한인권사진전을 개최했다.

● **김진무** : 북한이 지난 3월부터 스커드, 노동, 무수단, SLBM 등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하며 완성도를 높여나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핵 폭탄과 미사일을 결합하는 핵탄도미사일의 개발 완료와 실전배치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북한의 핵 개발 활동은 북한의 가공할 핵위협에 직면하는 상황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포기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북핵 위협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그동안 북한의 핵위협에 방어적, 수세적 대응책들로 일관해왔는데, 이제는 보다 공세적, 능동적으로 패러다임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어보다는 억제에 중점을 두고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핵우산 등 확장억제의 확고한 보장은 물론,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를 직접 겨냥하는 보다 공세적 억제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우리 군에서 북한이 핵도발 징후가 보이면 김정은 지도부를 비롯하여 평양을 초토화하겠다는 대량응징보복을 천명한 것은 북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북제재와 압박을 철저하게 이행함으로써 북한의 핵능력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함과 동시에 체제변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과거와 다른 더욱 철저하고 완벽한 대북 제재 필요해

● **김영수** : 사드 배치문제로 어색해진 중국 역시 이번 핵실험에 대해 규탄성명을 내고 항의했다고 합니다. 이번 핵실험으로 대북 제재에 다소 온건적이었던 중국의 입장이 바뀔 여지가 있을까요? 그리고 한반도 사드배치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요?

● **이수석** : 중국은 이전부터 북한의 핵실험에 부정적이었고 4차 핵실험으로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지도부의 대북 인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김정은 정권의 몰락으로 인한 북한체제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도 강력한 제재가 혹시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을 높일까 걱정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5차 핵실험으로 자신의 뒤



7월 18일 태평양 괌 미군기지에서 한국의 국방부 관계자들과 취재진이 사드포대를 살펴보고 있다.

통수를 때렸다고 인식하고 있는 중국은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좀 다른 국면입니다. 중국의 대외전략의 기본방향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견제입니다. 중국은 미국 중심의 새로운 안보질서가 재편되면서 중국을 견제, 포위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이런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중국도 사드배치가 중국의 안보에 큰 위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대략 알고 있을 겁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미국과 그 동맹국의 흑이나 있을지 모를 대중 포위전략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을 잘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죠. 어쨌든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북한핵의 위협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기에 사드배치 논란은 점차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진무** :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중국 시진핑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강력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인 2270호에 합의하고 그 이행을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불안정 우려 등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이익을 우선하며 제재에 여전히 소극적이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태도가 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5차 핵실험이 핵무기 실전배치를 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적 공조체제가 강화되면서 강력한 군사적 대비책을 추가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한국 내에서 미국의 전술핵 반입, 자체 핵보유를 주장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크게 훼손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북핵 위협을 빌미로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 강화의 일환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이 지난 1월 4차 핵실험을 계기로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고 보며, 5차 핵실험은 중국의 국익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하는 인식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강한 반발도 사드가 북핵 위협으로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크게 해친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미·일의 군사적 대비가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중국이 대북 제재 강화 등 선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한·미·일의 군사대비 강화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흥규** : 중국이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장에 반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국익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국익에 손상을 입히는 추가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상응하게 응징한다는 것이 중국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대해 반대하고, 북한의 제재에 참여하는 것은 자연스런 귀결입니다. 다만, 사드 문제 역시 중국의 핵심이익에 손상을 입히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도 한국은 물론 북한과도 갈등관계에 놓이는 곤혹스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미중 전략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불

가피한 것으로 인식하는 듯합니다.

● **라미경** : 중국의 기본 입장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태도도 바뀌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 대북제재 동참 이후 대북 영향력이 소진되어 버린 경험을 가진 중국은 이번 북한의 5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꺼려할 것입니다. 즉 대북제재의 핵심은 ‘원유, 식량 금수’ 인데 북한의 붕괴를 꺼려하는 시진핑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은 아주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책임 있는 ‘대국’ 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담과 전략적 견지에서 북한과의 관계 유지개선 이라는 ‘딜레마’ 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중국은 4차 핵실험 이후의



처음으로 근접 공개된 오산기지의 PAC-3.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중국도 한국은 물론 북한과도 갈등관계에 놓이는 곤혹스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미중 전략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는 듯합니다.



정책기조를 큰 변화 없이 유지 할 것이며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에는 형식적으로 동참하면서 국제사회 일원임을 강조하고, 미·중간의 갈등구조 속에서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반대는 고수하며, 대화 국면의 전환을 위해 '6자회담' 복귀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영수** : 이번 북한의 5차 핵실험은 대단히 큰 이슈이지만 우리 국민들은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호들갑 떨 필요는 없지만 불감증이라고 해도 될 만큼 무감각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국민의 안보불감증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노력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의 안보불감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이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 일까요?

● **김흥규** : 중요한 것은 정보의 수준과 정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당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기반한 논의와 여론의 조성이 중요합니다. 정치적 필요에 따른 여론의 주도나 정보에 대한 불신은 무관심과 불감증을 초래합니다. 이런 측

면에서 정부 지도층의 언어나 상황 분석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존의 안보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제는 핵을 보유하고 보다 공세적인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에 대응할 의지와 준비를 보여줘야 합니다.

● **라미경** :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실험이 지속되면서 국제사회의 한반도에 대한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에 비해 정작 위협의 당사자인 우리 국민의 안보불감증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보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주원인으로는 안보 해법 제시에 있어 여야 정치권의 서로 다른 시각이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안보불감증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보를 둘러싼 남남갈등의 특성을 살펴보면,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념적인 대립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는 각 정치세력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의 공고화와 지지 세력의 확대와 맞물려 나타납니다.

따라서 안보불감증 해소 방법으로 안보에 관한 한 초당적 범국민적 합의와 협력이 필수조건이라 생각합니다. 정치권의 배타적 대립구도는 여야 간의 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동시에 주요 정책현안을 정쟁화 시킴으로써 정권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안보메시지를 창조하고 전달할 때 고려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정보시대는 커뮤니케이션을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정보기술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통합하는 방법, 다양한 배경, 광범위한 목표와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상황지식(적절한 것과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둘째, 목표설정(문제확인, 목표설정, 자원확인, 피드백확인), 셋째, 커뮤니케이션 역량(메시지 채널의 선정), 넷째, 불안관리(불안의 원인, 국민의 반응, 명확한 메시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북핵 포기 위해 장기적 시각과 인내심 필요

● **김진무** : 국민들이 지나치게 안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불안해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북한의 핵위협을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와 군의 대응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남 진도군 협의회는 9월 20일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규탄대회를 실시했다.

일부 정치권에서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정부와 군의 대응에 대해 국민들이 불신하는 상황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이수석** : 북핵 위협이 일상화되다보니 국민들이 무감각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면, 금융과 실물경제, 관광이나 해외로부터의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동안 의식적으로 차분하게 평소처럼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많았 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5차 핵실험까지 한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죠. 국민들이 현재의 안보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와 사실들을 언론매체를 통해 자주 알려야합니다. 국가안보를 책임지기 위한 정부의 노력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소통의 계기를 마련해야겠지요.

● **유호열 수석부의장** : 전문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한반도 안보환경에서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많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수준, 특히 SLBM에 대한 평가와 군사적 대응방안을 시작으로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와 개선 방안,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책, 국론결집 방안 등이 다양하게 논의됐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일부 다른 의견이 있었지만 북한의 무모한 핵과 미사일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북한의 변화를 이루기 위한 치열

한 논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SLBM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대응태세 마련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실질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평소에 북한이 도발할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하고, 만약 도발할 경우 신속하고 강력하게 응징해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데 공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군을 신뢰하고,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 최선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힘을 모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엔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점차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봅니다. 다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는 견디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장기적인 시각과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된 북핵실험으로 한반도는 불안에 둘러 쌓여있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평화통일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유엔에서 대북제재 논의가 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낼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사드 배치를 포함해 국가안보에 대한 사안에 점차 국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내외에서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단합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많은 분들과 우리 자문위원들의 노력이 숨어있다고 봅니다. 수많은 갈등과 이익이 교차하고 모순적인 관계인 국제사회에서 작은 국익도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내부 갈등을 막고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만 지금의 위기에 대처하고, 주변국을 설득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세습독재체제로 핵-경제 병진노선이라는 초강수를 뒀으로써 정권의 명운을 핵무기와 이를 토대로 한 위협에 내 걸고 있습니다. 이를 바꾸려면 우리 내부의 단단한 의지와 국제사회의 공조가 절실합니다. 북한이 핵 도발을 지속하면 중국과 러시아도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더욱 강력한 제재로 북한 내부의 경제적 문제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엘리트 탈북 사태 이상의 심각한 내부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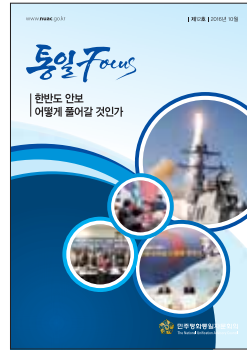
결국 북한 정권은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 없다는 무기력을 버리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하면 북한 핵을 포기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들과의 논의가 우리 자문위원들에게 북핵 해결을 위한 배경 지식과 의지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수** : 수석부의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장시간 동안 고견을 주시고 좋은 제안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을 잘 정리해서 정책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통일 활동을 전개하고 우리 안보문제의 중요성을 제고시키는 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국력은 군사력 곱하기 경제력 곱하기 국민의 사기, 단결력이라고 했습니다. 곱하기이기 때문에 하나가 영에 가까우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에서 오늘 안보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풀어갈 갈 것인가에 대한 고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동일Focus*



이 자료집은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으로 인해 불안해진 한반도 상황과 국제정세 등을 진단하고 사드배치 등으로 분열된 우리 국민의 국론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법 등을 모색하기 위해 ‘한반도 안보,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를 주제로 개최된 전문가 좌담회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통일포커스 제12호

발행일 2016년 10월
발행인 권태오
발행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대변인실 02)2250-2265

※ 이 자료집에 정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통일Focus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